



#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 완화를 통해 수혜농가 및 직불금 획기적 증대

친환경농업과 이완석 친환경정책팀장



공익형직불금의 법령상 농지대상요건인 『'17~'19년 직불금을 받은 농지』의 규정을 완화(규정삭제)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령개정을 관철시킴으로써,  
보조금을 받지 못하던 도내 영세 농업인을 구제시키고 국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킴



도내 8만9천농가에  
직불보조금 541억원(순증가분/전액국비)을  
추가 지급(예정)





# 5년 경과로 부가세 환급이 소멸된 한전주 이설 부가세의 환급추진 및 세입 조치

도로안전과 이희형 도로개선팀장



한전에서는 공익사업인 경우 한전주 이설 공사의 부가세는 면제이나 관례적으로 부가세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추후 환급해주고 있음. 道는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에서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가 경과했다는 사유로 환급해주지 않음




한전은 국세징수권자가 아니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부가세 환급 및 세입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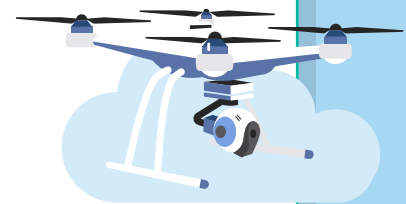


# 드론 등 ICT 활용을 통해 안전점검 고도화를 추진하다

안전특별점검단 이상국 주무관

 드론, GNSS, 3차원 입체영상분석 및 위험도 평가 S/W 등을 활용한 ICT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육안점검의 한계 극복

 3차원 공간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이 가능한 낙석위험도 평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관리 지원





#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노동안전과 이돈균 건설안전팀장



사업주를 포함한 노동자 및 시·군 적극참여 유도  
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도-시군 간담회 개최,  
건설안전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 도정 자료 제공을 통한 방송분야 보도 인용 활성화

언론협력담당관 윤지성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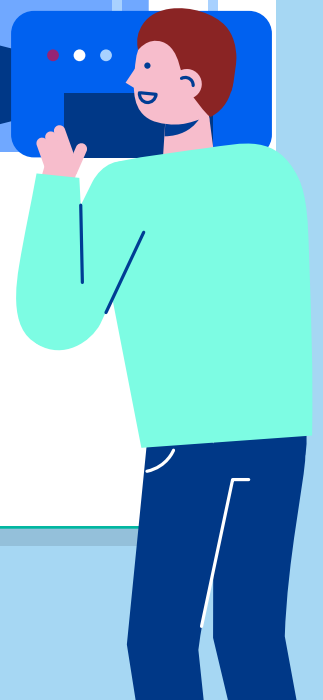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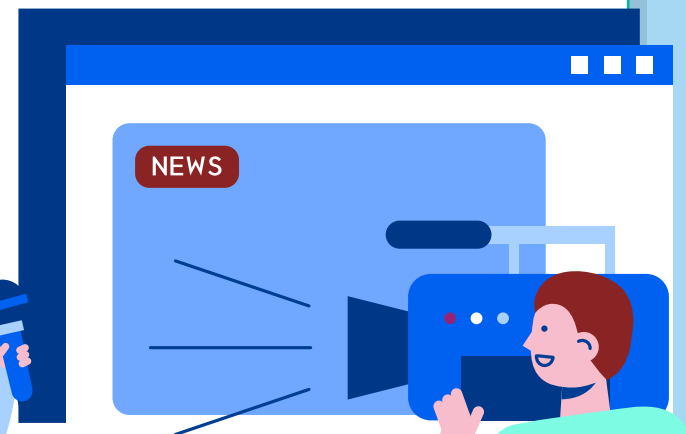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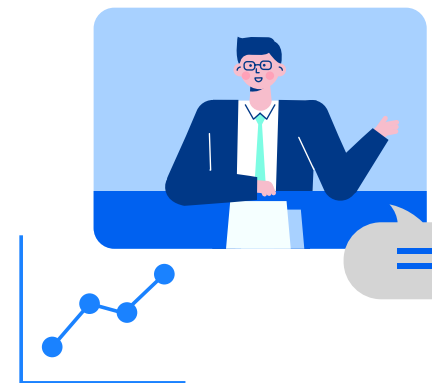


경기도의 주요 정책 정보를 도민에게  
보다 자주 전달하고자,  
경기도 홍보 아이템을 시기적절히 직접 취재하여  
핵심정보를 주요 방송사(KBS, MBC, SBS 등)에  
제공하여 보도인용율을 제고함.



주요 언론사, 자체 GTV 뉴스 콘텐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송출을 통해  
브리핑의 질적 향상 추구함

※ GTV 뉴스 제작 114건 중  
53건 보도 인용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추진

주택정책과 김영시 주무관



도내 임차인 전세피해 증가 추세로  
피해자의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제공 및  
전국 최초 입주자 이주비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현장설명회,  
사군 피해 상담소 마련,  
전세피해 지원 TF 구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미세먼지대책과 최윤정 주무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극적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생계형 차주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확대 건의로 환경부 규정 개정



약 169억원\* 추가 지원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추가지원금) 노후경유차 6,789대, 230만원/대  
생계형 노후경유차 2911대, 40만원/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 절감

## 건설안전기술과 광형선 주무관



도 및 31개 시·군에서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각각 만들어  
건설기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도에서 표준기준을 제정하여 도 및 31개 시·군이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절차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단축(약 65일/건별) 및  
소요 예산절감(42백만원/매년)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근거 마련으로 노동자 건강 및 복지증진 기여

노동권익과 최홍석 주무관



수도권 최초, 민선8기 공약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통해

① 노동자 건강권, 복지 증진

② 저렴한 세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③ 공공세탁소 운영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정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사업 프로세스 확립, 도민 대상 세탁소 네이밍 공모전 실시 통해

“블루밍 세탁소”의 정책브랜드 개발로 세탁소 설치 확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